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2022. 3. 3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추진 경과	1
II.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점검	5
1. 총괄	5
2. 분야별 추진성과	7
(1) 디지털 뉴딜	7
(2) 그린 뉴딜	8
(3) 휴먼 뉴딜	9
(4) 지역균형 뉴딜	10
(5) 뉴딜펀드 및 법·제도개선	11
III. 향후 발전방향	15

I. 추진 경과

1.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 1.0」 추진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추진 천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20.4.22]

-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추진

②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전환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20.7.14]

-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대전환 전략으로 디지털·그린 뉴딜(2축)과 안전망 강화(디딤돌)라는 ‘2+1 틀’ 제시
 - ① 우리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여 경제 역동성(Dynamics) 촉진
 - ② 경제·사회·생활기반 전 영역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
 - ③ 두터운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경제 복원력(Resilience) 강화
 - 신시장 창출을 견인하는 마중물로서의 재정투자*와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발전전략을 뒷받침
- * '20년 추경~'25년까지의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계획 마련

③ 추진동력의 배가를 위해 민간·지역으로 뉴딜 외연 확대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20.9.3 및 '20.10.13]

- 뉴딜 펀드*·뉴딜 금융**으로 “정부-민간(금융기관)-국민”의 3각 축을 정립하여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 확보

* '21~'25년간 정책형 뉴딜 펀드 20조원 조성,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

** 뉴딜 관련 분야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확대, 보증비율·보증료 우대 등

-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경제·사회와 지역의 동시적 대전환 추진

⇒ 뉴딜 프레임을 ‘2+1’(디지털·그린 뉴딜+안전망 강화) → ‘2+1+1’
(디지털·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뉴딜) 구조로 개편

2. 포용성·혁신성을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

④ 대내외 경제여건 급변을 고려하여 한 단계 진화한 '뉴딜 2.0' 마련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21.7.14]

- 코로나 디바이드*, 디지털 경쟁 가속화**, 탄소중립의 글로벌 뉴노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성·혁신성을 대폭 강화

* 코로나 충격의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 발생

** (美)2조 달러의 R&D 투자 발표('21.3월), (中)25년까지 9조 위안 투자 발표('21.3월) 등

- ①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여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 해소와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층 지원에 중점
- ②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를 선도할 ICT 융합 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 전환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 추진
- ③ '2050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 이행에 즉각 착수

⇒ 뉴딜 프레임을 '2+1+1'(디지털·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뉴딜)
→ '3+1'(디지털·그린·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 구조로 개편

- 마중물 재정투자를 확대¹⁾ 하여 뉴딜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입법과제 확대²⁾ 로 제도기반 확충

1) '25년까지 총 160조원(뉴딜 1.0) → 220조원(뉴딜 2.0) (+60조원)

국비 114조원(뉴딜 1.0) → 160조원(뉴딜 2.0) (+46조원)

2)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뉴딜 1.0) →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뉴딜 2.0)

- 포스트 코로나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 경쟁을 위하여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지원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해 근로자(전직 준비 등)와 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 등) 지원체계 구축

참고1

한국판 뉴딜의 구조

비전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
선도형 경제, 탄소중립 사회, 포용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추진 구조



추진 과제

① 디지털 뉴딜

- ① D.N.A 생태계 강화
- ②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③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④ SOC 디지털화

② 그린 뉴딜

- ①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 ②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③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④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③ 휴먼 뉴딜

- ① 사람투자
- ② 고용사회 안전망
- ③ 청년정책
- ④ 격차해소

④ 지역균형 뉴딜

- ①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②지자체 주도형 뉴딜, ③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뒷받침

재정 지원

민간 참여

제도 개편

참고2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 ☐ '25년까지 총사업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160조원(뉴딜 1.0) → **220조원(+60조원) 수준**(뉴딜2.0)으로 확대
- 국비는 114.1조원 → **160조원(+45.9조원) 수준**으로 확대

(단위: 조원, 국비)

분야		'20추경 ~ '25	
		뉴딜 1.0	뉴딜 2.0
디지털	① D.N.A 생태계 강화	31.9	33.5
	②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2.9	3.2
	③ 메타버스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2.6
	④ SOC 디지털화	10.0	9.7
	소 계	44.8	49조원 수준
그린	①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	4.8
	②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12.1	16.0
	③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4.3	30.0
	④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6.3	10.2
	소 계	42.7	61조원 수준
휴먼	① 사람투자	4.0	9.3
	② 고용·사회안전망	22.6	27.0
	③ 청년정책	-	8.0
	④ 격차해소	-	5.7
	소 계	26.6	50조원 수준
총 계		114.1	160조원 수준
지역균형 뉴딜		42.6	62조원 수준

- ☐ '22년 국비 23.2조원 → **33.1조원(+약 10조원)**으로 확대

(단위: 조원, 국비)

분야	뉴딜 1.0	뉴딜 2.0
	'22년	'22년
디지털	8.6	9.0
그린	10.3	12.7
휴먼	4.3	11.4
총 계	23.2	33.1
지역균형 뉴딜	10.2	13.1

Ⅱ.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점검

1. 총괄

① 코로나 위기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계기로 활용**

- 위기 속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 美·EU 등 주요국도 디지털·그린 육성대책을 발표하는 등 우리가 먼저 시작한 뉴딜이 세계가 함께 가는 보편적 정책방향화

▶ APEC: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 '푸트라자야 비전 2040'(무역자유화, 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청사진 채택('20.11월)
▶ IMF: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받을 전략('21.3월)
▶ OECD: 한국판 뉴딜은 환경 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21.8월)

② 과감한 재정투자와 범국가적 협력을 통한 **강력한 추진력 확보**

- 과감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 추동력 마련

* ('20예산) 5.4조원, ('21예산) 27.1조원, ('22예산) 33.1조원

- 뉴딜 전략회의, 당정추진본부 등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통해 뉴딜 사업 본격 착근 및 단기간에 28개의 뉴딜입법 제·개정 등 달성

③ 약 2년 만에 **디지털·그린분야의 미래성장 기반을 신속히 조성**

- D·N·A 기반구축에 주력하여 스마트공장, 닥터앤서 등 5G·AI 융합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간의 투자 확대*로 AI·디지털 혁명 생태계 확산

* 네이버, 카카오 등 28개 데이터센터 구축 및 통신 3사 5G구축 등 25조원 투자(~'24년)

- 건축·도시·산업* 등 국가 전반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그린 모빌리티 보급으로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7위 달성

* 그린 리모델링('21년 공공부문 약 10만호, 민간건물 1.3만건), 스마트 그린도시('21.3월 25개 착수), 스마트 그린산단('21년 10개소 지정) 등

④ 환경 급변 및 코로나 격차에 대응한 **포용적인 안전망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교육·돌봄 등 코로나 격차해소,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인력양성 강화 등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적기 대응
- 위기업종에 대한 사업재편지원 및 노동자의 직무전환교육 등 변화에 따른 기업·노동자 지원책 신속 보강

참고3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해외 평가

구 분	주요 평가
① 해외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경제 강국인 한국의 명성을 더 높일 것(Bloomberg, '20.7) • 그린 뉴딜은 고통스럽고 논쟁적이지만 필수적인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문제 해소를 위한 강력한 목표 설정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중요한 시발점(Channel News Asia, '20.7)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전국가 디지털 전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제시한다.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가장 야심찬 전략 중의 하나(The Diplomat, '20.8) • 한국의 그린뉴딜은 현명한 경제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세계에 보여준다. 한국은 선진국들 사이에서의 그린 선도 회복에 대한 예리함을 보여준다.(The Conversation, '20.9)
② 각국 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미래 청사진으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무역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채택(APEC 정상회의, '20.11) • 한국판 뉴딜 정책, 한반도 평화 등 문 대통령의 개방적·건설적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1.1) • 한국판 뉴딜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까지 내실 있게 포괄(WEF 한국 특별회의 초청장, '21.1) • 문 대통령의 루즈벨트 기념관 방문과 한국판 뉴딜 추진에 감사(미국 바이든 대통령, '21.5) •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 중미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통점, 기술혁신과 친환경정책 노하우를 배우겠다(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 대통령, '21.6) • 한국-우즈베키스탄의 미래 협력은 녹색성장, 디지털, 안전망 강화라는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검토해갈 것을 제안(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1.12)
③ 국제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은 ... 지속가능한 성장과 디지털화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과 전략은 우리(라틴아메리카)에게 길을 밝혀주는 예(IDB, '20.9) • 석탄 비의존, 민간 RE100 이니셔티브 등 녹색목표 설정은 한국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 한국은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Net-Zero)에 대한 강력한 선언(GGGI, '20.12) •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포용성 제고 위한 환영받을 전략(IMF, '21.3) • 한국의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투자전략이자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아시아 경제에 청사진을 제시(ADB, '21.4) • 한국판 뉴딜은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 공고화에 기여(OECD 한국경제보고서, '21.8)
④ 해외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코로나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국가들 중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매우 환영(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20.9) •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21.1) •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한국판 뉴딜은 강력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둔.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어젠다를 모두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디지털 기술을 보유(앙헬 구리아 전 OECD 사무총장, '21.2) • 한국의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도 견인할 것(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 '21.5) •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은 '2050 탄소중립선언'과 함께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사례를 제시(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 '21.5)

2. 분야별 추진 성과

(1) '디지털 뉴딜' 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 공고화

주요 성과	'20년	'21년	'22년	'25년
데이터 시장규모	20.0조원	23.1조원 ^e	30조원	43조원
AI 학습용데이터 구축	191종	381종	691종	1,341종
스마트 공장	2.1만개	2.5만개	3만개	3만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	302개	2,451개	10,009개

①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D.N.A 기반 구축

- (Data) AI학습용데이터 구축('21년 381종) 및 개방('21년 191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1년 16개) 등으로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
- * 시장규모 증가('19년 16.9→'21년 23.1조원), 데이터 공급기업 2.9배 증가('19년 393→'21년 1,126개), 데이터담 참여 상장기업 5.2배 증가('19년 5→'21년 26개)
- (Network) 5G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5G MEC(13개 융합서비스 모델), 스마트공장('21년 25만개), 지능형 박물관('21년 65개) 등 혁신 서비스 창출
- (AI) 의료영상 등 AI+X 7대 융합 프로젝트 추진('21년 실증랩 8개소)

② 행정·교육·의료 등 소분야 디지털 융합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인프라 전반의 디지털 관리체계 확충

- (행정) 국민비서('21.3월 백신접종 알림 전자통관 상담 등 알람·상담 21종), 모바일 신분증('21년 공무원증, '22.1월 운전면허증) 등으로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 (교육) 전국의 초·중·고 38만개 교실에 고성능 WiFi 구축('22.2월), 학생용 스마트기기 13만대 보급('21년) 등 디지털 인프라 대폭 확충
- (의료) 스마트병원(감염병 대응 등 6개 분야 개발지원('20~'21)), 닥터앤서('20년 치매 등 8개 질환→'21년 12개 질환 진단 개발착수) 등 신기술 활용 의료 혁신
- (SOC) 정밀도로지도(고속도로·주요국도), 3D지도(주요 도시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20~'21년 85개 市) 구축 등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③ 메타버스·클라우드·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육성

- (메타버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700여개 기업·기관)을 통해 개발수요 발굴, 제조·의료·국방분야(7개)에 XR 적용, 실감 콘텐츠 지원('21, 124개) 등 확산 촉진
- (신산업)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21년 302개), 지능형 로봇 확산(물류·방역·홍보 등 6종 서비스 로봇 실증) 등 첨단 산업 육성

(2) '그린 뉴딜' 로 녹색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기반 마련

주요 성과	'20년	'21년	'22년	'25년
그린리모델링(공공 임대주택·건축물)	1.1만개소	9.5만개소	18.8만개소	23만개소
스마트그린산단	7개소	10개소	10개소	15개소
재생에너지 발전용량(태양광·풍력)	19.0GW	23.4GW	26.4GW	42.7GW
무공해차 보급(전기차·수소차)	14.9만대	25.7만대	49.3만대	133만대

① 건축·도시·산업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녹색전환 가속화

- (건축) 그린리모델링('21년 공공임대주택 9.3만호, 공공건축물* 1,716동) 등 공공부문 건물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에너지 고효율로 리모델링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22.2월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활성화 수행)
- 민간건물('21년, 1.3만건)에도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출이자 지원 등)
- (도시) 스마트 그린도시('21.3월, 25개 착수)를 선정하여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2년간 국비 60~100억원 지원)
- (산업) 스마트 그린산단 10개소('21년) 지정,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저탄소·고효율 전환*
* 3개 스마트 그린산단(군산, 부산, 울산) 사업단 출범('22.2월)

② 신재생에너지·수소경제 확산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 (재생에너지) 4년 연속 설비보급 목표 초과달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대폭 확대(태양광·풍력 '20년 19.0GW → '21년 23.4GW)
- (수소경제)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21.2월), 수소경제이행 기본 계획 마련('21.11월) 등으로 수소경제 조성
- (그린모빌리티) 전기·수소차*('22.2월 누적, 전기차 24.9만대, 수소차 2만대)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 미래차 시장 경쟁력 제고
*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7위 달성('21년 보급실적 기준)
** 무공해차 보급목표 강화(10%→12%, '22.3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22.1월~) 등

③ 한국형 탄소중립, 녹색금융 등 지속추진 기반 마련

-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기반 정비*, 순환경제 활성화(자원순환 산단 시범조성 수행기관 공모, '22.3월),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추진**
*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 확대('21.10월),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 로드맵 마련('21.12월)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21.3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21.4월)
- (녹색금융) 녹색채권지침('20.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21.12월) 마련으로 기업 등의 녹색투자·그린금융 활성화 기반 구축

(3) '휴먼 뉴딜' 로 유망분야 인력공급 및 포용성 강화

주요 성과	'20년	'21년	'22년	'25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1,367만명	1,455만명	1,550만명	2,100만명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	65.7만명	76만명	76만명+α	80만명+α
시·도 사회서비스원	11개소	14개소	17개소	17개소
AI·SW 핵심 인재 양성	1.4만명	3.2만명	5.3만명	13.3만명

① 빠짐없이 촘촘하게 고용·사회안전망 포용성 강화

-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추진('21년 근로자 등 1,455만명, 예술인 10.7만명, 특고 57.7만명 고용보험 가입)
 - * 예술인('20년), 특고 12직종('21년), 플랫폼종사자('22.1월) → 전국민 목표('25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20년 14개 → '21년 15개) 등으로 가입자 증가('20년 65.7만명 → '21년 76만명)
- (사회안전망)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21.10월), 재난적 의료비 확대('21.11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② 미래주역인 청년지원 강화 및 '코로나 디바이드' 해소

- (청년지원) 청년·신혼부부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공급('21.7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연장('21.12월), 청년희망적금*('22.2월) 등 지원
 - * 가입자 수: 12개 은행을 통해 약 290만명 가입('22년 3.7월 기준)
- (청년 취·창업) 신산업 분야 청년채용 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청년 모태펀드('21년 1.2천억원) 조성 및 창업융자자금('21년 21천억원) 제공
 -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 채용 시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 지원, 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대해 1인당 400~1,200만원 세액공제
- (격차해소) 4대 교육향상(기초학력·다문화/장애인·사회성함양·저소득층), 5대 돌봄격차 패키지(한부모·노인·아동·장애인·인프라) 본격 추진
 -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20년 11 → '21년 14개소)

③ 미래유망분야 인력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사람투자) 디지털(AI·SW)·그린 등 인력양성*을 통하여 신산업·첨단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디지털·그린뉴딜 뒷받침
 - * AI·SW, 녹색융합기술 핵심인재: ('20) 1.4만명, 1.4천명 → ('21) 3.2만명, 2천명(누적)
- (접근성) 디지털배움터('21년, 1,000개소),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20~'21년, 1,284개),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신청 제한기준 폐지('21.1월) 등

[4] '지역균형 뉴딜' 로 뉴딜의 지역확산과 지역균형발전 강화

주요 성과	'20년	'21년		'22년	'25년
스마트특성화 전략산업 과제	27개	50개		77개	100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24개	29개		법령정비·사업화 지원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	3개권역		4개권역(24년까지 자펀드 5천억원)	

①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3축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 확산

- (중앙정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뉴딜 지역사업 확대('22년 13.1조원)
 - 스마트특성화 전략산업 과제 지원('21년 50개), 지역주력산업 개편('21년 48개), 규제자유특구* 지정('21년 29개, '20.10월 뉴딜발표 이후 8개)
 - * 그린에너지 ESS(광주), 정밀의료(강원), 그린수소(충북), 암모니아(부산) 등
 - 뉴딜관련 지방투자기업에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21년 69개)
 - * 민간투자 1조 7천억원, 신규일자리 3,286개 창출 전망
- (지자체)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발굴 및 재정·행정지원 강화
 - 지자체 주도 우수사업* 15개 선정, 특교세 지원('21.7월, 300억원)
 - *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강원), 드론하이웨이(대전) 등
 - 주민 주도형 뉴딜사업* 40개 선정·지원('21.12월, 150억원)
 - * 생활밀착형 시민 RE100 플랫폼(대구·광주 태양광 협업), 자원순환마을(아산) 등
 -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권역별 투자설명회 등 민간투자 유도
 - * '21년 기준 3개 권역(부산권, 충청권, 동남권(울산·경남))

→ '24년까지 4개권역 자펀드 5,000억원 조성, 지역 중소기업 집중 투자
- (공공기관) 공공기관 선도사업 및 혁신도시별 협업과제 추진
 -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12개 지역뉴딜사업* 발굴, 10개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지자체·지역사회 협업과제 추진
 - * 인천항 스마트물류 센터 건립(인천항만공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교통안전공단) 등

② 제도기반 마련 등 지속가능한 지역뉴딜 생태계 조성

- (제도기반)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 마련('21.2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1.12월) 등 지역균형 뉴딜 제도기반 마련
 - * 균형발전계획 및 균형위 심의의결 사항에 반영, 행정·재정 지원절차 신설 등
- (규제개선) 행안부·지자체 합동으로 규제과제 개선('21년 41건)

[5] '뉴딜펀드 및 법·제도개선' 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① 민간의 뉴딜참여 확산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 정책금융 지원

-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분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5년간('21~'25년) 20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추진 중
 - * 정부 3조원 정책금융(산은성장사다리펀드) 4조원 민간 13조원 → 정책 35% / 민간 65%
 - '21년의 경우 시장의 적극적 참여로 '21년 당초 조성목표인 4조원을 1.6조원 상회한 5.6조원 조성('22.2월말 기준 6조원)
 - '21년에 조성한 정책형 뉴딜펀드 5.6조원 중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총 2,500억원(재정 800억원, 국민 1,700억원) 조성
 - '22.2월말 기준,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디지털·그린 분야 160여개 중소·중견기업에 7,820억원 투자 집행
 - '22년의 경우 4조원(국민참여 뉴딜펀드 2천억원) 조성 목표로 1차 위탁운용사(14개사) 선정 완료('22.3)
-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21.5, '22.1)를 통해 태양광, SR철도 등 3건(1,200억원 수준)의 뉴딜 인프라 승인*
 - * '뉴딜인프라 태양광펀드('21.5월 승인)'의 경우 출시 후 하루 만에 완판('21.7)
 -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9%) 분리과세(2억원 한도)
 - ** 조세특례제한법('20.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1.2) 개정
- (정책금융) 5년간('21~'25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추진 중
 - * '21년 공급목표: 17.5조원(산은 4.5, 수은 5, 기은 2.6, 신보 5.4조원)
 - 뉴딜 관련 분야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확대, 사업화 단계별 보증비율·보증료 우대 등으로 정책금융 지원*
 - * (산은) 우대금리 최대 $\Delta 0.8\%p$ (수은) 대출한도 최대 +10%p, 우대금리 최대 $\Delta 1.0\%p$ (기은) 우대금리 최대 $\Delta 1.0\%p$ (신보)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 최대 $\Delta 0.4\%p$

② 지속적 뉴딜 추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법·제도 정비

- (법)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로 43개 법률 입법 추진 중
→ 43개 법률 전체 국회 발의 완료, 28개 법률 제·개정 완료

디지털(7개 완료)	그린(10개 완료)	휴먼(10개 완료)
[1] 디지털경제 혁신 데이터기본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2] 탄소중립 전략 그린뉴딜기본법, 기후위기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3]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6] 녹색산업전환 산업집적법, 녹색융합클러스터법	[4]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남녀고용평등법 [7] 사람투자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원격교육법, 직업능력개발법 [9] 격차해소지원 소상공인지원법, 기초학력보장법 [11] 청년정책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5] 미래모빌리티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10] 뉴딜금융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퇴직급여보장법,	환경기술산업법	
지역균형(1개 완료)	[12] 지역균형뉴딜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도개선) 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경제계와 함께 뉴딜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191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개선 중

③ 디지털·탄소중립화에 따른 선제적 사업개편 및 노동전환 지원

- (사업구조개편) 사업구조개편 지원대상 확대(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추가), 기업지원강화(R&D, 자금융자, 세제지원 등) 등 추진('21.7)
 - 전략적·통합적으로 사업구조개편 수요발굴·관리를 지원하고, TCB*(기술신용평가)를 활용해 성장성 등을 평가하도록 체계 구축
 - * TCB(Technology Credit Bureau): 기업의 기술신용등급(기술등급+신용등급) 평가
 - 사업재편·전환 기업 대상 인센티브 강화*, 자금 공급** 등 지원
 - *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 축소(3년 → 1년) 등 세제지원 강화 및 사업재편 R&D 사업 확대('22. 180억원) 등
 - ** 산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진공 '사업전환 지원자금('22. 2.5천억원)' 등 활용
- (노동전환) 신산업분야 역량 강화 지원(훈련비·훈련과정 등), 고용안전망 연계(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로 고용전환 충격 완화
 - 노동전환 분석센터('22.1)·지원센터('22.2) 개소 및 근로자 이·전직 특화훈련, 사업자 노동전환 지원 등 추진

참고4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43개 법률) 체계

* 밀줄·진하게 : 입법완료(28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선도하는 뉴딜 (제도기반)	[1] 디지털경제 혁신 <u>1-1. 데이터기본법 制定</u> <u>1-2.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制定</u> <u>1-3. 중기 스마트제조혁신법 制定</u> <u>1-4. 국가공간정보기본법 改正</u> <u>1-5. 개인정보보호법 改正</u> <u>1-6. 디지털집현전법 制定</u> <u>1-7. 전자금융거래법 改正</u>	[2] 탄소중립 전략 <u>2-1. 그린뉴딜기본법 制定</u> <u>2-2. 기후위기대응법 制定</u> <u>2-3. 기후기술개발촉진법 制定</u> <u>2-4. 환경영향평가법 改正</u> [3] 에너지 전환 <u>3-1. 신재생에너지법 改正</u> <u>3-2. 풍력원스탑삽법 制定</u> <u>3-3. 전기사업법 改正</u> <u>3-4. 분산에너지특별법 制定</u>	[4]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u>4-1. 고용보험법 改正</u> <u>4-2. 보험료징수법 改正</u> <u>4-3. 남녀고용평등법 改正</u> <u>4-4. 지역사회통합돌봄법 制定</u>
성장하는 뉴딜 (산업육성)	[5] 미래모빌리티 <u>5-1. 도로교통법 改正</u>	<u>5-2. 여객자동차법 改正</u> <u>5-3. 화물자동차법 改正</u> [6] 녹색산업전환 <u>6-1. 산업집적법 改正</u> <u>6-2. 녹색융합클러스터법 制定</u> <u>6-3. 모듈러주택법 改正</u> <u>6-4. 순환경제사회촉진법 改正</u>	[7] 사람투자 <u>7-1. 고등교육법 改正</u> <u>7-2. 평생교육법 改正</u> <u>7-3. 원격교육법 制定</u> <u>7-4. 직업능력개발법 改正</u>
공정한 뉴딜 (전환지원)	(8) 공정전환 및 사업개편 <u>8-1. 소상공인지원법(디지털전환) 改正</u> <u>8-2. 에너지전환지원법 制定</u> <u>8-3. 기업활력특별법 改正</u> <u>8-4. 중기사업전환법 改正</u>	<u>8-5. 노동전환지원법 制定</u>	(9) 격차해소지원 <u>9-1. 디지털 포용법 制定</u> <u>9-2.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 改正</u> <u>9-3. 기초학력보장법 制定</u>
상생하는 뉴딜 (포용성장)	(10) 뉴딜금융활성화 <u>10-1. 조세특례제한법 改正</u> <u>10-2. 퇴직급여보장법 改正</u>	<u>10-3. 녹색금융촉진특별법 制定</u> <u>10-4. 환경기술산업법 改正</u>	(11) 청년정책지원 <u>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改正</u>
	지역균형 뉴딜	(12) 지역균형뉴딜 지원 <u>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改正</u>	

* 소상공인지원법은 2건을 1건으로 처리

참고5

한국판 뉴딜 분야별 주요성과

분야	재정투자+제도개선		민간투자
디지털 뉴딜	재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학습용 데이터) 381종 구축, 191종 개방('21)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분야, 180개 센터 구축('21) ▶(AI+X) 7대 분야 8개 실증랩 구축, 4개 솔루션 개발('21.10) ▶(지능형 정부) 공공데이터 14.8만개 개방, 국민비서('21) ▶(SOC) 지능형교통체계(ITS) 6,600km, 재난 조기경보(340개소)('21) ▶(스마트화) 스마트 공장(2.5만개)/상점(1.7만개)/공방(681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데이터 사업 개시('21.7월~) ▶데이터센터 구축~'24년, 총 28개 전망 ▶초거대AI 투자(네이버·LG·SKT 등) ▶스마트물류센터(18개소, 6천억원)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21.1) ▶(디지털)데이터기본법('21.10), 디지털집현전법('21.6),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21.12), 원격교육법('21.9) 제정 ▶(지능형 정부) 모바일 공무원증('21.1), 운전면허증('22.1) 도입 ▶(5G 융합)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21.10) ▶(클라우드)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 도입('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원 정밀지도(규제샌드박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700여개 기관) ▶통신4사 5G 등 총 투자 목표 수립('20~'22년 3년간 24.5~25.7조원)
그린 뉴딜	재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1,716동, 임대주택 9.3만호('21)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물량 484교 선정('21.6) ▶(전기수소차) 전기차 24.9만대, 수소차 2만대('22.2, 누적) ▶(친환경선박)친환경선박 54척(공공 17척, 민간 37척) 전환 ▶(녹색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71개사, 스마트생태공장 41개사, 클린팩토리 427개소 지원('21,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안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 계획 발표('21.2, ~'30년)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RE100 연계 투자기업 선정('21.6)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총 36조원 투자계획 발표('21.5, ~'30년)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기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 ▶(신재생) RPS 의무비율 및 상한 상향 조정('21.4) ▶(RE100) 신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허용(PPA)('21.4) ▶(수소)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21.2) ▶(녹색융합클러스터) 클러스터법 시행('21.12) ▶(친환경선박)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도입('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경제분야 총 43조원 투자 계획 발표('21.3, '30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2,035억원 ▶그린뉴딜펀드 3,350억원 조성('21.12)
휴먼 뉴딜	재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취약계층 지원('21년 42.3만명) ▶(K-Digital Training) 민간 훈련 278개 과정('22.3, 112개 기관) ▶(청년디지털) '20~'21년 15.8만명 IT 분야 청년 인건비 지원 ▶(교육회복종합방안) 기초학력 강화('21, 2,229억),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교육비) 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연 520~700만원, 둘째이상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인재양성(삼성 SSIFY 등) ▶IT훈련과정 참여 ((주)SK 등) ▶장애인 사회 안전망 기술 개발 스타트업 지원(SK)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예술인('20.12), 특고('21.7), 플랫폼종사자('22.1) ▶(산재보험) 특고 범위 확대, 적용제외 기준 개편('21.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21.1 시행)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 ▶(교육격차해소)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2.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농촌인 지원 분야 4,025억 투자(농협) ▶배달 라이더 산재 기금 지원 활성화(우아한 형제들)
지역 균형 뉴딜	재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우수사업) 특교세 450억원('21.1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9개 기업, 1,958억원('21.12) ▶(지역주력산업) R&D-사업화 과제 2,942억원('21.12)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업과제 485억원('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및 규제 자유특구펀드(350억원) 활용 투자 ▶정책형 뉴딜펀드 내 지역투자 전문 '지역뉴딜 펀드' '22.2월 750억원 결성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1.12)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 위한 경자구역법 개정('21.6) ▶(투자심사) 42건 2.6조원 승인, 5건 1,385억원 면제('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뉴딜 벤처펀드(3개 권역 3,800억원)
뉴딜 펀드	재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형 뉴딜펀드 '21년 5.6조원 조성(4조원 목표) → '국민참여 뉴딜펀드'(2,500억원)로 국민과 성과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0개 중소중견기업에 약 7,820억원 투자('22.2월말)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딜인프라펀드 세제지원('20.12 조특법 개정) (2억 한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Ⅲ. 향후 발전방향

◇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디지털·그린경제로의 국가대전환을 추진한 모멘텀 유지를 위해 뉴딜투자, 법제도 개혁을 지속하여 민간혁신 유도

1. 총괄

- (뉴딜투자)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재정투자 지속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정책금융 공급*에서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 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동참 견인
 - * '25년까지의 계획(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정상 추진
- (법·제도개혁)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 입법이 미완료된 법률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추가과제 지속 발굴
 - 뉴딜 2.0 추진과제로 '21.7월부터 추진 중인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 조속 완비
 - *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중기사업전환법 개정,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등
- (민간·지역 확산) 디지털·그린 혁신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모델의 지속 발굴, 핵심 균형발전 정책의 뉴딜 연계 및 주민 주도형 뉴딜 강화 등으로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자생적 뉴딜 생태계 확산
 -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관련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도 적극 유도

2. 분야별 발전방향

- ① (디지털 뉴딜) 국민 체감형 디지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국내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
 - 데이터·5G·AI 등의 성과를 다양한 영역으로 파급·확산하고 주요기술과 타 산업간 융합·연계를 촉진하여 질적 성장 도모

- 민·관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등으로 우리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글로벌화 촉진

② **(그린 뉴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확산을 가속화하고 주민 참여형·생활 밀착형 그린 뉴딜 정책을 지속 발굴·확대

- 무공해차 보급 확대(~'25년, 133만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확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 지원전략* 확보 및 정의로운 전환 성공 모델 양성, 친환경 기술나눔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협력 지속

* 탄소중립 취약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 재직자 교육, 재취업 등

-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지속 확충, 탄소중립 그린도시 및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국민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 강화

③ **(휴먼 뉴딜)** 디지털·그린 인력양성 고도화,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사람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 뒷받침

- 산업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훈련 확산, 인력수급전망 분석 확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인력양성을 고도화하여 신산업 발전 지원
-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
 - 취약 청년의 주거·자산형성 지원뿐 아니라,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취·창업 기반을 가일층 확대

④ **(지역균형 뉴딜)** 지역이 스스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

-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역주력산업 등 핵심 균형발전 정책을 뉴딜과 연계하여 지역별 사업 특화·확산·정착 도모
- 주민·공공기관이 발굴·추진하는 뉴딜사업 지원, 전담조직 운영,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선도사업을 적극 뒷받침